

지역경제와 발전의 측정지표

조 연 상

목원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1. 측정지표의 의의

최근 지역균형발전이 지역감정의 해소와 국민통합,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지역간 경제력 및 재정력 격차 해소와 지역주민들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평적 공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나 지역혁신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라고 하겠다.

참여정부에서는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추진된 일극 집중형 발전모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는 인식 하에, 압축성장의 이면에서 초래된 인구 및 산업의 일부지역에의 편중과 여타지역의 소외라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이라는 의제를 전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 즉 대통령 국정과제로 격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과거에는 수도권의 역제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을 상호의존관계·상생관계로 발전시켜 전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어느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발전 해소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불균형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확보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배측면에서 파악한 주민소득이 이러한 측정지표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시키고자 한다.

II. 측정지표의 활용도

1. 측정지표로서의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계로서, 약칭 GRDP라고 한다. GRDP¹⁾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이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된다.

생산측면에서 파악한 GRDP는 발생된 소득이 시도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시도의 주민에게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분배 측면의 주민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광양제철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주민등록을 인근 순천시에 두고 있다면, 광양제철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광양시에 귀속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순천시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는 주민소득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따라서 분배측면에서 파악한 주민소득이 지역경제의 보다 정확한 측정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GRDP의 분배계정이 추계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주민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GRDP조차도 공표되지 않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독자적으로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이들 시·군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GRDP 혹은 주민소득 통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²⁾.

1) GRDP는 시도별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용되는 기초자료와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GRDP의 합계와 GDP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GRDP에는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부문 생산액과 수입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GRDP의 전국 합계액은 기초자료가 달라짐에 따라 GDP와는 3~5%의 차이가 발생한다.

2. 지역내총생산의 활용 가능성

지역내총생산의 추계는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 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통계청에서 광역자치단체별 GRDP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GRDP는 일부 지역에서만 자단체 스스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소득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의 실태와 지역별 소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GRDP의 유용성이 한층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측정지표의 하나로서 GRDP가 갖는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경제력의 대표적 지표

지역내총생산(GRDP)은 특정 지역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매년 경제력이 증대하였는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해당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지역경제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부문에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산업구조 정책의 기초 자료

지역내총생산(GRDP)은 산업구조 즉, 농림축산 및 수산업 등 1차산업, 광업 및 제조업 등 2차산업, 그리고 SOC 및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의 비중을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적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산업전략 수립 및 애로요인 타개책을 수립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료이다.

2) 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에서 논문(조연상·조항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 제2호(통권16호), 2004.12.30, 한국지방재정학회, pp. 107-138 참고)을 통해 전국 시군별 주민소득을 추계한 바 있다. 동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주민세소득할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누진소득세 모형을 추정해내고 이에 따라 전국 시군의 GRD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농림축산 및 수산업 등 1차산업이 제외되어 군지역처럼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GRDP가 낮게 추정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광양시와 담양군 등의 GRDP 추계시에는 주민세소득할(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특별징수)을 실효세율로 역산하여 주민소득을 추정하고 농림축산 및 수산업부문을 시와 군의 농업통계를 기초로 품목별 판매가격(수매가격 포함)을 조사하여 판매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율(혹은 소득률)을 곱하여 품목별 부가가치를 추정하였다.

(3)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한 예산과정의 효율성 도모

지역내총생산 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중기재정계획 등 중장기 예산 수립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될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초재정수요액 등을 추정할 때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에서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도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GRDP 추계가 이루어진다면 GRDP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5)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시에 유용한 자료

정책은 무릇 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시행될 때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정확한 GRDP 추계가 이루어지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전략 등 주요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그리고 정책효과를 평가할 때에 무엇보다 정확한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 지자체간 경쟁 촉진

지역내총생산(GRDP)은 당해 지자체와 동급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에도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GRDP의 비교를 통해 타지역 주민들과의 경제력과 소득력을 비교할 수 있다. 1인당 GRDP 대비 1인당 지방세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지역의 지방세 부담이 높은지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다. 1인당 GRDP 대비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조정교부금 등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지역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지자체보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적게 받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측정지표의 활용 사례

1. 지역소득 격차

지역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변수는 지역주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소득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여기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GRDP 분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5년의 경우 전국의 GRDP 합계는 총 815조 2,890억원이며, 서울특별시가 약186조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약 163조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GRDP가 가장 작은 규모로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도로 약 5조 2,890억원 규모이다.

<표 2>에서는 지역경제 격차가 현저히 드러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GRDP 점유율을 살펴 본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수도권이 전체 GRDP의 약 48%를 점유하고 있고, 영남권이 약 27 ~ 8%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남권과 충청권은 약 1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합하면 약 75%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경부축을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과 산업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충청권의 경우 최근 들어 점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장설립에 대한 수도권규제 정책의 결과로 수도권에 있던 제조업의 남하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생산라인이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에 신설되어 충청권의 GRDP 점유율을 높이게 된 주요 요인이 되었다.

〈표 1〉 지역별 GRDP 분포

구분	경 상 가 격			2000년 불변가격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전국	410,131	577,971	815,289	485,494	577,971	729,241
서울특별시	102,171	138,492	186,042	127,111	138,492	159,588
부산광역시	26,141	33,840	46,079	32,501	33,840	40,862
대구광역시	15,782	20,776	26,959	20,365	20,776	22,986
인천광역시	21,064	26,231	37,687	25,247	26,231	33,007
광주광역시	9,486	12,629	17,820	11,387	12,629	15,504
대전광역시	9,560	13,559	18,767	11,618	13,559	16,463
울산광역시	0	28,355	40,142	0	28,355	36,253
경기도	72,569	111,793	162,619	85,756	111,793	157,171
강원도	12,040	16,462	22,065	14,801	16,462	18,695
충청북도	14,038	19,521	25,520	15,154	19,521	24,004
충청남도	17,330	28,963	46,718	20,942	28,963	41,281
전라북도	14,112	18,978	24,572	16,820	18,978	22,482
전라남도	20,909	26,908	40,491	23,930	26,908	31,592
경상북도	25,931	38,446	57,638	29,586	38,446	53,803
경상남도	44,799	37,728	54,253	45,361	37,728	48,962
제주도	4,197	5,289	7,917	4,918	5,289	6,587

자료 : 통계청

〈표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점유율

구분	경상가격 기준			2000년 불변가격 기준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수도권	47.7	47.8	47.4	49.0	47.8	48.0
영남권	27.5	27.5	27.6	26.3	27.5	27.8
호남권	10.9	10.1	10.2	10.7	10.1	9.5
강원도	2.9	2.8	2.7	3.0	2.8	2.6
충청권	10.0	10.7	11.2	9.8	10.7	11.2
제주도	1.0	0.9	1.0	1.0	0.9	0.9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에서 1인당GRDP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1995년에 전국 평균치(1.00)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으나, 2000년 이후 점차 낮아져, 2005년에는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반면에 충청권의 1인당GRDP는 1995년 전국 평균치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계속 높아져 2005년에는 약 10% 이상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영남권도 계속 높아져 2005년에는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호남권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발전의 격차

지역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혹은 정체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면 성장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가 혹은 더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성장률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표 4〉에서는 2000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각 지역의 GRDP 연평균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다. 동 표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 기간이 포함된 1995-2000년 기간보다 2000-05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2000년 기간에 전국평균 성장률(3.5%)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및 경상북도이다. 경상남도는 울산광역시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0~05년 기간에 전국평균 성장률(4.8%)보다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7.3%)와 경기도(7.1%), 경상북도(7.0%), 경상남도(5.4%), 울산광역시(5.0%)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충청남도 북부지역은 광의의 수도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과 비수도권, 영남권과 호남권의 발전 격차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전된 지역은 더욱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1인당GRDP의 비교

구분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수도권	1.05	1.03	0.98	1.08	1.03	1.00
영남권	0.96	0.99	1.03	0.92	0.99	1.04
호남권	0.93	0.89	0.96	0.92	0.89	0.90
강원도	0.89	0.88	0.88	0.93	0.88	0.83
충청권	1.00	1.06	1.10	0.99	1.06	1.11
제주도	0.90	0.82	0.86	0.89	0.82	0.80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 GRDP의 연평균 성장률

시도	95~2000	2000~05	95~05
전국	3.5%	4.8%	4.2%
서울특별시	1.7%	2.9%	2.3%
부산광역시	0.8%	3.8%	2.3%
대구광역시	0.4%	2.0%	1.2%
인천광역시	0.8%	4.7%	2.7%
광주광역시	2.1%	4.2%	3.1%
대전광역시	3.1%	4.0%	3.5%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5.4%	7.1%	6.2%
강원도	2.2%	2.6%	2.4%
충청북도	5.2%	4.2%	4.7%
충청남도	6.7%	7.3%	7.0%
전라북도	2.4%	3.4%	2.9%
전라남도	2.4%	3.3%	2.8%
경상북도	5.4%	7.0%	6.2%
경상남도	-3.6%	5.4%	0.8%
제주도	1.5%	4.5%	3.0%

3. 인구의 집중

지역경제와 발전의 격차가 커질수록 발전된 지역으로의 인구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벌여온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5〉와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인구는 2005년도에 2,32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과밀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인구비중도 점차 높아져서 2005년도에는 48.2%라는 즉,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이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0.48%)의 거의 3배 정도로 높은 1.3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과밀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이다.

2000~05년 기간에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지역은 수도권 이외로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인구의 절대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증가율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 그나마 충청권은 인구증가율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 영남권, 호남권, 강원도 등 전 지역에서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집중 현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지역경제와 발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연유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은 산업관련인프라 외에도 생활관련인프라와 교육문화관련인프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도권에는 특히 생활관련인프라와 교육문화관련인프라가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는데도, 동 지역의 지자체들의 재정력이 타 지역 지자체들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인프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의 축적 정도를 측정하려면, 매년 이루어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측정할 수 있는 유량(flow) 개념의 측정지표 외에, 저장(stock) 개념의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측정지표가 필요한 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본스톡의 추계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용성이 매우 낮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스톡 추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추계인구와 인구증가율

구분	1995	2000	2005	95~2000	2000~05
수도권	20,414	21,747	23,202	1.27%	1.30%
영남권	12,919	13,106	12,922	0.29%	-0.28%
호남권	5,284	5,344	5,113	0.23%	-0.88%
강원도	1,482	1,516	1,488	0.45%	-0.36%
충청권	4,483	4,771	4,871	1.25%	0.42%
제주도	512	524	542	0.49%	0.66%
전국	45,093	47,008	48,138	0.84%	0.48%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표 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1995	2000	2005
수도권	45.3	46.3	48.2
영남권	28.6	27.9	26.8
호남권	11.7	11.4	10.6
강원도	3.3	3.2	3.1
충청권	9.9	10.1	10.1
제주도	1.1	1.1	1.1
전국	100.0	100.0	100.0

4. 재정력 격차

지역경제와 발전의 격차,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수도권 집중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력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지방재정 신장의 원천이 되며, 또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갖게 된다.³⁾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소득이 높을수록 지방세입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⁴⁾, 지방재정조정제도 혹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방세입 규모가 클수록 지방세출 규모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역으로 지방세출규모가 크다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구입 증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생산활동의 애로 제거 등으로 지역경제 활동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동기반의 강화는 주민소득을 높여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발전된 지역에서는 확대재생산 과정을 낫후된 지역에서는 축소재생산과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표 7〉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세수입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크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지방세수입은 그보다 훨씬 크게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낙후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자발적 노력을 많이 기울이더라도, 자체재원이 워낙 빈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기본적 행재정수요 충족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표 8〉의 1인당지방세수입을 살펴보다라도 수도권 지역과 영남권의 상대적 크기가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표 9〉에서 지방재정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다라도 마찬가지이다.

〈표 7〉 지방세수입의 지역별분포

구분	1995	2000	2005
수도권	53.9	56.7	57.6
영남권	25.8	23.8	23.0
호남권	8.1	7.7	7.0
강원도	2.6	2.4	2.5
충청권	8.5	8.2	8.8
제주도	1.1	1.2	1.1
전국	100.0	100.0	100.0

3) 우명동(2001), pp.39-41

4)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처럼 지방세가 소득과세 중심의 체계가 아닐 경우 주민소득과 비례해서 지방세수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세원배분의 문제가 제기된다.

〈표 8〉 1인당지방세

구분	1인당 지방세(천원)			상대적 크기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전국	340	433	747	1.00	1.00	1.00
서울특별시	420	616	1,000	1.24	1.42	1.34
부산광역시	315	384	632	0.93	0.89	0.85
대구광역시	329	368	608	0.97	0.85	0.81
인천광역시	329	402	675	0.97	0.93	0.90
광주광역시	289	350	536	0.85	0.81	0.72
대전광역시	345	398	626	1.02	0.92	0.84
울산광역시	-	449	782	-	1.04	1.05
경기도	407	474	845	1.20	1.09	1.13
강원도	271	329	597	0.80	0.76	0.80
충청북도	278	317	558	0.82	0.73	0.75
충청남도	262	337	740	0.77	0.78	0.99
전라북도	237	275	460	0.70	0.64	0.61
전라남도	197	276	498	0.58	0.64	0.67
경상북도	268	342	597	0.79	0.79	0.80
경상남도	411	349	663	1.21	0.81	0.89
제주도	331	448	741	0.98	1.03	0.99

자료 : 통계청

〈표 9〉 재정자립도

구분	1995	2000	2005
전국	57.2	53.3	54.4
서울특별시	84.2	79.1	81.4
부산광역시	63.7	62.8	61.0
대구광역시	66.4	63.7	63.2
인천광역시	70.8	60.5	61.3
광주광역시	60.8	56.4	52.8
대전광역시	63.1	60.4	63.2
울산광역시	-	65.2	62.9
경기도	75.1	66.1	67.4
강원도	36.7	38.7	38.0
충청북도	44.5	42.5	42.2
충청남도	31.7	37.9	44.8
전라북도	38.2	33.2	28.3
전라남도	30.0	30.5	33.1
경상북도	38.6	37.9	37.9
경상남도	51.4	42.1	49.9
제주도	38.8	34.4	37.6

IV. 결 언

이제까지 지역경제와 발전의 측정지표로 다소 불충분하지만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활용하여 현실적인 지역경제 격차 현황을 매우 개략적이거나 살펴보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다 정확한 지역경제의 측정지표는 GRDP의 분배측면 혹은 주민소득이기

때문에, 주민소득 통계 혹은 GRDP의 분배측면을 하루속히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역경제 격차가 큰 시·군지역 즉, 기초자치단체의 GRDP도 통일된 기준 하에서 책임있는 행정정기관에 의해 조사·발표되어야 한다.

GRDP는 지방재정이나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기본 통계임에도 과거에는 지역갈등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표되지 않은 것 같고, 현재에도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GRDP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광공업 및 제조업 등 2차산업은 통계청에서 계속 추계하여 발표해왔고, 농림어업 등 1차산업 기초통계는 기초단체에서 계속 수집·정리해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면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추계할 수 있고, 따라서 3차산업에 대한 데이터만 추가로 수집·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과 인력의 제약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GRDP 추계가 어렵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⁵⁾.

지방자치제가 활발해지면서 기초자치단체의 GRDP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고,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나 지역혁신전략 등 주요 국정과제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GRDP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방정부 재정진단모형에 관한 연구」, 1995
 우명동, 「지방재정론」, 도서출판 해남, 2001
 이계식·박종구·오연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KDI, 1990.10.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제13집제2호), 1999.2
 조연상, 「지방재정의 재정력격차 완화방안 연구」, 국제경제학회 「제30차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권, 1992, pp.195-217.
 「지역간 공평성과 재정력지표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제9집, 한국재정학회,

5) 참고(2007) 참고

pp. 119-140. 1995. 3.25.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연구」, 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pp. 5-28, 1998. 7. 4.

「지역경제력과 재정력격차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창간호, 한국재정정책학회,
pp. 1-18, 1999. 2. 25..

「지역주민소득 역비례형 교부금제도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제2호, 한국재정정책학회,
pp. 23-47. 2000. 2.25.

「지역총생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지방재정학회 월례발표회. 2007. 1.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분석」, 각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편람」, 각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1997

Buchanan, J.M., “Federalism and Fiscal Equity”,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Vol.XL,
1950.: *Readings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Selected by a Committee of The A.E.A.
Richard D. Irwin, Homewood, Illinois, 1959.

Kuno Schedler, “Performance Measurement in a Direct Democratic Environment: Local
Government Reforms in Switzerland”, *Public Budgeting & Finance* 14(4), 1994

Musgrave, R.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McGraw-Hill, 1959. :
유한성譯, 「재정이론」, 삼영사, 1984.

Musgrave, R.A. & P.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3rd ed. McGraw-
Hill, 1980. : 유한성譯, 「재정학II」, 三英社, 1987.

Musgrave, R.A. & P.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5th ed., McGraw Hill,
1989.

Rawls J., *A Theory of Justice*, 5th ed. Harvard Univ. Press, 1973.